

법조인 인터뷰

.... Interview



‘국민을 위한 법’ 만들고 해석해
정부 입법까지 이끄는
법제처 변호사들



법제처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다양한 부처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며 정부입법을 책임지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제국, 자치법제지원과 등 주요 부서에는 현재 26명의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본보는 10일 법제처 변호사

3인방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가슴을 뛰게 만든다고 입을 모았다.

1. ‘더 완벽한 법을 위한 발걸음’ 정지영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 과장

정지영(53·사법연수원 28기)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 과장은 17년째 법제처에서 법제 업무를 지원해온 베테랑 입법전문가다. 현재는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등의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과편을 나갔다가 올해 1월에 법제처로 돌아왔다.

정 과장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정치권의 입장 차가 큰 법률 이슈가 터지며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에 법



〈김영미 과장 · 정지영 과장 · 임종훈 서기관〉

사위 업무를 수행했다.

“법사위에 과견된 뒤 처음으로 맡았던 이슈는 2020년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법률화되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을 마련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급하게 개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막고 완벽에 가까운 법을 만들기 위해 법률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했고, 법체계를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 과장은 법제처에 입사하기 전 로펌에서 7년간 변호사로서 M&A나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정 과장은 “법령의 부족한 부분 및 이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

민한다는 점에서 로펌 변호사와 법제처 변호사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정된 법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지거나 바뀌어가는 법령을 다루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사각지대와 빈틈을 찾아내 이를 보완하고 정비한다는 점에서 법제 업무는 좀 더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법조인들이 법제처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법제처에는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더 많은 법률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법제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큰 조직입니다.”

2. ‘행복 법령 디자이너’ 임종훈 경제법제국 서기관

임중훈(47·38기) 경제법제국 서기관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변호사가 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아내의 직장이 있는 안산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로 시작했다. 그는 “주변 소시민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자를 대변하며 소소한 행복을 얻는 변호사로 살고 싶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를 회상했다. 임 서기관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방 의뢰인이 더 억울한 것 같은 사례들을 종종 접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한양대학교 법대 학부를 졸업한 임 서기관은 노동 분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 봄, 파업 참가 노동자들이 수십 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을 다룬 TV 방송프로그램을 접하고 한국 노동법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임 서기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한 사례가 인상 깊었다고 했다.

임 서기관은 2019년 성년후견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포함해 총 275건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를 추진

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일상적인 일 처리를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는 “위헌적이 조항이라는 생각에 관련 부처에게 법령 정비 의견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는 부처가 거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이미 직무수행 능력 검증 수단이 마련돼 있었던 사실을 찾아냈다.”며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성년후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임 서기관의 노력으로 해당 조항의 일부는 개정이 된 상태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임 서기관은 “법제처에서 법령의 위헌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비를 추진했는데 결국 나중에 실제로 위헌 판정까지 나오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헌법 정신에 부합했다는 생각이 감회가 깊었다.”고 말했다.

임 서기관은 법제처에서 변호사로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입법적 영역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법을 디자인해보고 싶다면 법제처는 좋은 선택지’라며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어 보람차다. ‘행복 법령 디자이너’로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 변호사들을 법제처에서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3. ‘국민 권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김영미 법령해석국 사회문화 법령해석 과장

김영미(41·변호사시험 2회) 법령해석국 사회문화 법령해석 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소관 법령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해 갈등을 조정하고 의미가 모호한 법령을 정비한다.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김 과장은 변호사가 되기 전 삼성전자, 외교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총괄 전략마케팅팀에서 중국영업 관련 업무를 맡았고, 3년간 근무한 외교부에서는 동북아시아국 중국과 서기관으로 일했다.

“외교부에서 근무하면서 법률가들의 도움 없이는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 협약을 체결할 때도 법률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무기가 됐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유였죠.”

김 과장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김 과장은 변호사업계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했다.

김 과장은 “법무부에 제출할 변호사 직역 및 국민 권익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제공했다.”며 “법령을 검토하고 이를 해석

하는 일을 하면서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제처에 입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 물리는 유권해석 요청과 민원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국민이 정부 부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제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게 체계가 바뀐 이후 민원 접수 건수는 크게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 133건에 그쳤던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604건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김 과장은 해석의 파급력이 큰 유권해석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라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해석은 행정부 최종 유권해석으로, 굉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보람이 크지만 모든 안건의 판단이유를 국민에 공개하기 때문에 때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뛰게 한다. 스스로의 법률전문성을 믿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업무를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출처/법률신문)